청련사·봉은사, 전생 과보 참회 의식 '생전예수재' 설행

신중일 · 김가령 기자

10월 10일, 중양절 맞아 청련사, 봉은사 경내서

사부대중 '업장소멸' 기원 "불교 유산 전승에 최선" 국가무형유산 등재 발원도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스님들이 천수바라의식을 하고 있다.


봉은사 대중스님들이 택전점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 '생전예수재'가 올해 1월 26일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발표한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생전예수재의 국가무형유산 등재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태고종 양주 청련사와 조계종 서울 봉은사가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국태민안과 전생 업장 소멸을 발원하는 생전예수재를 잇달아 봉행했다.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회장 상진 스님, 이하 보존회)는 10월 10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청련사 회주)의 주석 사찰 양주 청련사 경내 대적광전과 명부전 일원에서 '국태민안과 삼세인과 소멸을 위한 청련사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도량을 옹호해주실 호법성중을 모시는 '시련'과 설판 재자(齋者)의 제영가와 일체 고혼 영가를 맞이하는 '재대령', 삼조의 가지력에 의지해 영가들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는 '관욕'이 진행됐다.

이어 〈화엄경〉 '세주묘엄품'에 등장하는 천신과 성중 104위에게 수행자를 보살피고 도량을 수호해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하는 '신중작법', 법회의 주인공인 부처님을 예수도량 중정으로 모시는 '괘불이운', 지전을 명부에서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드는 '조전점안', 경함에 경전을 이운하는 '경함이운', 불보살과 성현에서 공양을 올리는 '운수상단' 등이 진행됐다.

'예수시왕생칠재(預修十王七齋)' 본식은 소청사자 봉송사자·소청 중위·소청고사·마구단 불공·관음시식·전시식·경신봉송·봉송회향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식 동참 대중은 스스로 참회하며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의 증명법사 태고종 종정 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의 고통에서 벗어나 복락을 누리기 위해 예수(預修)하고 돌아가실 분은 왕생정토를 발원하며, 이미 돌아가신 분은 해탈을 발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재 설행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운경 스님은 대중에게 생전예수재 기간 중 △매일 108참회 △하루 한번 선행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기 △타인을 흉보지 않고 미워않기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경어쓰기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 6가지 선업의 실천행을 제시했다.

보존회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 의례인 생전예수재 보존 전승에 힘쓸 것을 천명했다. 상진 스님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생전예수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불제자의 소명이다. 앞으로도 청련사는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계승해 한국불교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끊임없이 이어감은 물론 민족의 유산이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생전예수재를 모신 공덕으로 전생의 빚을 갚고 밝은 지혜를 얻어 일체 업장은 소멸되고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올해 8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제52호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설행했다. 입재를 시작으로 49일 간 매주 금요일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주제로 법문과 시식을 진행하며 업장 소멸과 열반 성취를 발원했다.

(사)생전예수재보존회를 2017년 설립하며 생전예수재 전통을 이어온 봉은사는 10월 10~11일 이틀간 경내 일원에서 생전예수재 회향식을 봉행하고 49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첫날 명종 10타로 시작한 회향식은 △신중작법 괘불 △불패 이운 △예수도량 건립 △주지스님 법문 △금강경 합송 △사자단과 상단의식 등으로 거행됐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중단의식(시왕단) △하단의식(고사단-함합소-마구단) △영단의식에 이어 자신의 죄를 직접 고하는 일종의 상소문 '함합소'를 태우는 봉송회향으로 마무리됐다.

사부대중은 봉송회향 때 회향식에서 사용한 금은전, 번 등 모든 의물을 봉송단에 태우며 본인의 열반 성취와 예수재 공덕 회향을 발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에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육바라밀 실천을 당부했다. 스님은 "감정기복을 다스리고 생각으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지계를 실천하여 베푸는 삶을 살자"며 "나와 불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는 자리이타행인 예수재를 한 공덕으로 모든 원하는 일이 성취되길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전했다.

사노위,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첫 추모예식

10월 14일 광화문광장서 진상규명, 대책마련 촉구 "생명존중 세상 마련되길"



대책모임은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불교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인 추모예식에 동참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피해 대책 마련을 기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0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예식'에 함께했다. 참사가 공론화된 2011년 이후 13년이 지나 열린 첫 공식 추모행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노위를 비롯한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등이 동참해 기도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대책모임은 추모예식 이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 발생 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제대로 애도할 수도, 이 재난에서 회복될 수도 없다"며 "국민 102만 명이 다치고 죽은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희생자와 피해자 회복의 길이 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노위원 덕인 스님은 "아직까지도 수백만명이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있지만 가해 기업과 문제 제품에 인증을 한 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세월호, 이태원, 오송, 아리셀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처럼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지만 그 길이 지난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스님은 "이들은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사노위는 희생자 분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안전보장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한사평, 예술로 종교화합의 장 열다

10월 13일 광화문광장서 중앙신도회, 선명상 체험 사찰음식 홍보 부스 운영



불교를 비롯한 7개 종교가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종교문화를 알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7대 종단 평신도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김회인, 이하 한사평)가 10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 문화 예술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7개 종교문화예술공연을 비롯해 레크레이션, 7대 종교 전시·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7개 종교 연합합창단과 싱잉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아름다운 세상'은 종교를 넘어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사평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체험'과 '사찰음식' 홍보·전시 부스를 운영해 이웃종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불교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회인 한사평 대표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진흥원, 학술콘텐츠 공모 당선작 발표

10월 15일 증서 수여식 학술 · 콘텐츠 부문 18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10월 15일 진흥원 임원실에서 '제10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당선작 확정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설립 취지인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조명하고 불교를 현실에 맞게 연구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6월 공고를 시작해 8월 중순까지 총 66편(학술 38편, 콘텐츠 28편)의 학술 및 콘텐츠가 접수됐다.

진흥원은 심사과정을 거쳐 학술부문 9편과 콘텐츠 부문 9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총 1억3730만원을 지급했다. 김민재 기자

